

근대부강국가에서 네트워크 지식국가로

유석진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치



네트워크 지식국가

하영선 · 김상배 엮음
(주)을유문화사 2006. 12. 31 | 552쪽 | 18,000원

새천년과 함께 시작된 '사이버세계 정치연구회(이후 정보세계 정치연구회로 개칭, 회장 하영선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가 7년간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여 엮은 책이, 하영선, 김상배 엮음 「네트워크 지식국가: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이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물론 정치학자들에게도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부제인 '21세기 세계정치의 변환'에 대한 이론적인 차원에서의 학문적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환의 요체이자 궁극적인 지향점은 '네트워크 지식국가'라고 필자들은 정리하고 있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네트워크국가와 지식국가를 합한 개념이다.

첫째, 국가구조의 기본적인 형태가 네트워크적인 특성을 가지게 되며 국가의 활동이 지구적 수준에서 짜여져 있는 네트워크 위에서 이루어진다. 둘째, 국가의 권력자원 중에서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 지식은 경제력과 군사력과 같은 전통적인 권력자원의 형태와 행사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그 자체가 권력자원이 되고 있다. (372쪽)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였던 20세기적 근대국민국가와 21세기적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차이에 필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세기 서세동점의 태풍 속에서 근대국민국가라는 세계시간과 표준을 따라가지 못하였던 한국과 중국은 식민지배와 패전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했고, 이에 일찍 적응한 일본은 비록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배를 겪기는 하였으나 중심국가로 부상하는데 성공하였다. 21세기의 변환은 19세기의 변환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큰 도전과 응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필자들은 파악한다. 이 도전의 신체를 정확히 파악하여 세계적 변환의 추세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에 적절히 응전하는 것이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19세기가 상비군과 관료제 그리고 과학기술로 무장한 서구 근대국가가 무력과 경제력을 앞세워 만들어낸 질서였다면, 21세기는 이러한 무력과 경제력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지식의 생산, 유통과 소비를 주도하는 국가에 의해 질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파악하기 때문에 지식국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게놈(인간유전자지도)프로젝트 등으로 대표되는 IT와 BT에서의 우위가 그러하고, 영화 '쥬라기 공원' 등의 상상력과 이를 현실화시켜 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그러하며, 세계 금융시장에서 미국이 점하고 있는 위상이 그러하다.

이러한 지식국가에 더하여 네트워크 국가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는가? 국가는 지역, 국가, 국제적 글로벌 수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넘나들면서 지식과 같은 권력자원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이때의 국가행위는 다양한 지식주체들의 활동을 네트워킹하며

정치

그것을 조종, 조정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근대국가에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였던 기능을, 다양한 비정부기구(대학, 기업, 연구소, 시민단체, 국제 조직)들과의 연계관계 속에서 즉 다양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세계화와 정보화의 물결에 휩싸인 21세기에 근대국가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작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비대한 조직이 되어 버렸다. 지구온난화나 황사, 전염병, 테러, 마약, 범죄 등은 개별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국가 하부 단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삶과 관련된 문제들이 너무나 다기화 되었기 때문에 정부만이 주체가 되어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각종 국제기구와 INGO, 대학, 연구소,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사례는 전통적인 국가단위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21세기적 변환을 설명하기 위하여 총 4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21세기의 변환을 이해하기 위한 전사(前史)로서 1부에서는 서세동점의 시절인 19세기말과 20세기 전반부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국민부강국가의 전파와 변환'을 국가이념(2장)과 군사국가(3장), 경제국가(4장)의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 2부에서는 1부에 기초하여 근대군사국가의 변환을 군사(5장), 테러(6장), 외교(7장)의 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추적하고 있다. 3부에서는 근대경제국가의 변환을 무역(8장), 금융(9장), 생산(10장)의 세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4부에서는 군사와 경제 측면의 변환을 뒷받침하고 있는 국가와 세계정치 자체의 변환을 - 근대지식국가의 출현과 지속성과 변화(11장), 생명공학(12장), 문화제국(13장), 문화세계정치(14장), 세계화시대의 네트워크국가(15장) 등의 경험적·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부상'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트워크 지식국가는 "국민국가의 양대 축인 국민/민족과 국가의 이완을 배경으로 하여 영토적 경계의 안과 밖에서 출현하는 개방형 복합 네트워크의 형태로 부상하는 국가"(50쪽)로 정의된다. "지식과 네트워크의 복합적 부상에 대응하여 자기조직의 과정을 추구하고

있는 21세기 국가의 미래적 모습"(51쪽)이 네트워크 지식국가이다. 근대라는 인식론과 국가라는 존재론을 뛰어넘는 네트워크 개념을 정립하려는 시도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물질적 수단에 한정되지 않고 지식을 중요한 권력자원으로 정립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딱딱한 이론적 논의를 하는 것보다,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관점에서 미국이 세 가지 차원의 지식을 동원하여 생명공학 거버넌스를 주도한 예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하자. "도구적 차원에서는 국가재정을 투자하여 기초과학의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또 기업과 지역 등 사회부문에 기술 확산을 촉진하는 제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기능을 담당하였고, 구조적 차원에서는 국내적으로는 다양한 제도형성을 통해서 기술혁신과 상업화의 촉진을 위한 게임규칙을 만들고 적용하였으며, 글로벌 수준에서는 글로벌 지적재산권 레짐(regime)을 미국표준에 맞추어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을 하였다. 구성적 차원에서는 생명공학의 연구에서 안전성과 윤리성의 가치보다 경쟁력 가치를 우선하는 담론을 정책담론과 제도에 반영함으로써 특정 이해를 우선하는 정책을 지지하는 노력을 보였다." (12장, 404쪽)

그러면 필자들은 이러한 세계정치의 변환 속에서 우리는 취하여야 할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가? "정부가 나서서 아날로그 시대에 제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문화강국을 달성하려는 발전국가의 발상은 디지털 시대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산업의 숨을 돌리기 위한 임시방편의 방패막이 노릇은 할지언정 급속히 부상하는 새로운 문화생산과 전파의 방식으로서의 실리우드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일 수는 없다... 저항적 문화수호운동을 넘어서 글로벌 코드와 호환되는 안과 밖의 네트워크 전략이 필요하다. 안으로 움크리는 '집적단지(cluster)'가 아닌, 밖으로 열린 네트워크의 '노드(node)'를 저항하는 발상이 필요하다. (13장, 437쪽) 정확하게 근대국가적 발상에 기초한 발전국가 논의로부터 세계표준에 적합한 국가의 네트워크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는 '늑대'로 표상되는 근대국가의 환경에서 "다른 동물들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자기 생명과 먹이를 스스로 확보해야 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은 5중 거미줄(네트워크)을 쳐야 한다." (1장, 52쪽) 한반도 통일 네트워크,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화의 네트워크, 사이버공간의 네트워크, 나라 안의 공간 네트워크(1장 52~53쪽)가 그것이다. 공간적 차원에서의 5중 네트워크는 여섯 개의 영역(무대)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전쟁과 평화의 안보무대, 부국의 경제무대, 문화무대(사이버문화 포함), 생태균형무대, 그리고 앞의 다양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이해갈등을 최종적으로 조종하는 정치무대가 있으며, 21세기 정보기술혁명으로 인하여 네 무대와 중앙상부 정치무대의 기반무대로서 지식무대가 있다. 다섯 가지의 공간 네트워크와 여섯 가지의 영역을 중심으로 조밀한 망을 짜보면 서른 가지의 공간/영역 별 과제가 등장한다. 이러한 작업들은 국제적인 문제도 잘하고 국내적인 갈등도 슬기롭게 해결하겠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복잡다단하게 얽혀있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걸맞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과의 지식생산에서의 협력, 조정, 조종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네트워크 지식 국가를 위의 영역/공간을 통하여 주어지는 서른 가지의 셀(cell)을 종합적으로 조정,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를 띠게 된다. 이 책이 던지는 가장 명확한 메시지는 19세기와 20세기적인 발상으로는 새로운 세기의 세계정치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점과 새로운 발상의 시작은 네트워크 지식국가에서 찾아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책의 작업이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과제와 한국의 국가적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추가/보완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네트워크(국가)의 개념이 보다 엄밀하게 학문적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국가)로 정의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다. 네트워크의 정의가 불확실함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네트워크로 파악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면, 새롭게 제시하는 네트워크국가의 개념 자체가 분석적인 설명력을 상실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 네트워크와 지식의 관계망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어떤 종류의 지식이 20세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어떤 종류의 지식이 21세기인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식과 네트워크의 커플링(coupling)과 디커플링(decoupling)에 대한 체계적 분석의 필요성이다. 어떤 속성을 가진 지식이 어떤 형태의 네트워크와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가 다양한 행위 주체와 네트워크화 한다는 것과 일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국내 정치의 (예를 들어 선거, 민주성, 정당성, 사회통합 등)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가? 본원적으로 상충하며 갈등적인 관계라면 이 긴장관계의 해소를 위한 적절한 장치는 어떻게 모색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넷째, 위의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역과 공간의 상호작용하였을 때 각각의 셀 별로 주어지는 지식/네트워크의 작동 방식과 전체적인 작동 방식의 조응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생산, 무역, 금융, 생명공학, 실리콘밸리의 구체적인 분석이 책에는 있지만, 각 셀에 해당되는 경험적인 연구들이 향후에 네트워크 지식국가 이론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지식국가의 논의가 어떻게 매력국가(혹은 매력정치)의 논의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론적 접합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보세계 정치연구회의 후속 작업이 되어야 하기도 하면서 한국의 정치학계가 같이 고민해야 할 화두라고 생각된다.

유석진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미국 예일대 정치학박사.

저서 : 『한국의 통상 협상』 등.